

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일시 | 2017. 12. 21.(목) 15:00

| 장소 | 국회본관 귀빈식당(별실1호)



| 공동주최 |

민주연구원 · 좋은교사운동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사)갈등해결과대화



CONTENTS

- **작장:**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인 사 말 •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iii

• 발 제 1 •

학교폭력법 개정의 교육적 필요성과 회복적 실천의 가능성 1

-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 이재영 이사장(한국회복적정의협회)

• 발 제 2 •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법의 개정 방향 21

- 탁경국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 발 제 3 •

회복적 과정으로 학교 폭력 풀어가기 37

- 안보경 교사(강화여자중학교)

• 토 론 •

- 이기철 대표(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53
- 조인식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55
- 문 진 연구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57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정책위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회복적생활교육센터 박숙영 소장님, 민변 탁경국 변호사님, 강화여중 안보경 선생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하신 학교폭력피해자도움단 이기철 대표님,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님, 교육부 문진 연구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던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로, 정부는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제’를 만들었고, 2013년 ‘현장맞춤형 학교 폭력대책’, 2014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기본계획’, 2015년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대책’ 등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무수히 쏟아내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의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나,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고,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에 대한 실효성은 지속인 논란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양상도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통계 조사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어, 교육부는 내년부터 변화된 학교폭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과 현행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대다수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신고단계부터 치유과정까지 많은 부분 방치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학생과 학부모들, 지금도 어디선가 남몰래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을 학생들을 생각하며 보다 나은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21.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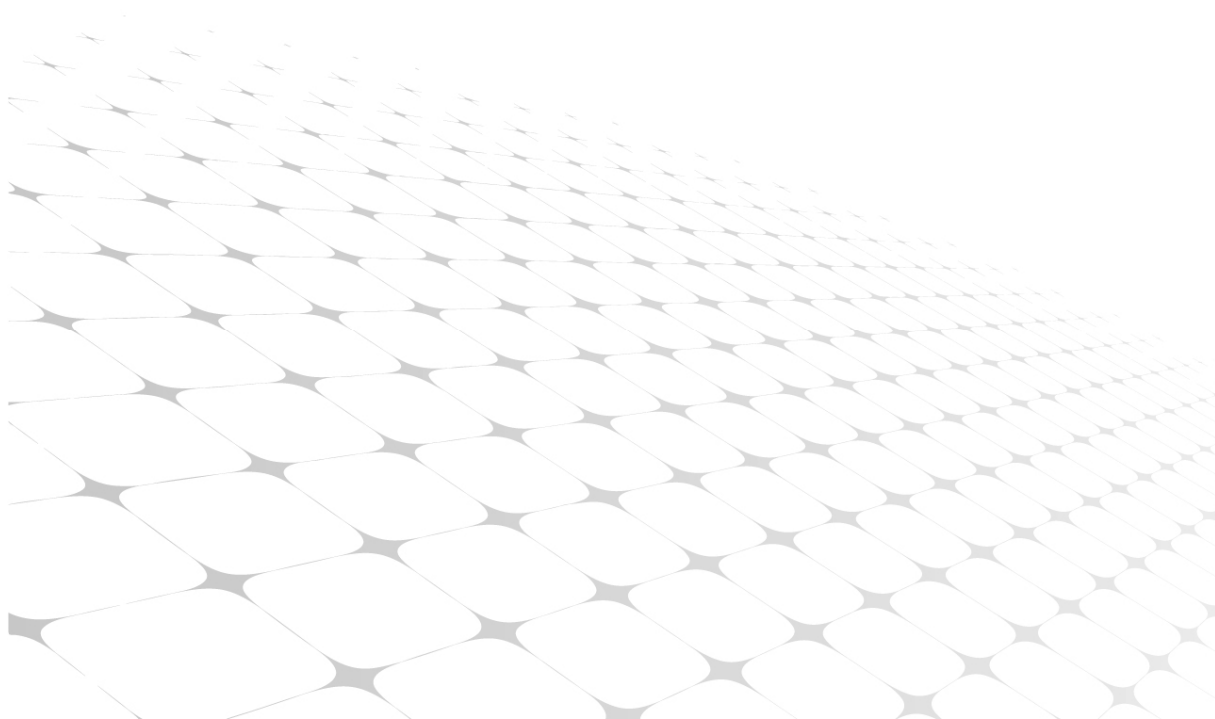
발 제

01

학교폭력법 개정의 교육적 필요성과 회복적 실천의 가능성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이재영 이사장(한국회복적정의협회)



박숙영
이재영

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소장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학교폭력법 개정의 교육적 필요성과 회복적 실천의 가능성

목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변천사
2.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3. 현행 학교폭력 대처와 예방법의 한계
4.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한 해법
5.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능성과 회복적 대화모임
6. 회복적 생활교육 실현을 위한 제안
7. 마무리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변천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공포되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조명을 받게 될 때마다 정부의 긴급대책이 수립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이 2008년(법률 제8887호)과 2009년(법률 제9642호), 2011년(법률 제1064호) 개정작업을 통해 개선되었다. 법률 개정의 노력과 달리 현실은 집단따돌림, 무단결석, 가출, 살인, 자살 문제 등으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었다.¹⁾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전 사회적 충격이었으며,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고 정부는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을 대폭 개정하게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체성과 성격의 변화가 있어 왔다.

1) 이승현, 고성혜, 김미숙(2012). 현행 학교폭력 대응체계 및 문제점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법 성격의 주된 변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²⁾

개정 년도	특징	내용
2004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규정과 갈등해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행위’ 포함. -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보다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초점 - 피해자가 장난이라면 장난으로 인정, 피해자가 괴롭힘이라고 하면 학교폭력에 해당
2008	죄형법정주의의 적용과 가해행위의 명확화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삭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세계에서의 폭력행위 포함.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로 이분법적인 학교폭력대응책을 명확히 함.
2012	‘가해학생 엄벌과 피해학생 보호’라는 이원화 강화	- ‘강제적 심부름’ 행위 추가.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범위 확대’ - 가해학생의 조치결과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표1] 학교폭력예방법 성격의 변화

강지명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갈수록 형사정책틀을 강화하여 왔으며,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규정과 갈등해결’에서 ‘가해행위 명확화를 통한 학교폭력 통제’로 옮겨갔다. 학교는 점차 형사정책적 접근으로 사법화되어 가면서 교육 기관으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엄벌주의로 흘러갔고, 또 다른 많은 부작용과 고통을 낳고 있다.

2.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가. 학교폭력의 원인 : 생태학적 요인³⁾

학교폭력은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으며 개인과 그의 가족,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규범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태학적 접근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해결방법에 대한 적합하고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2) 강지명(2017). ‘책임과 상호존중’을 배우는 학교폭력해결 프로세스. 서울시의회 학교폭력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참고하였다.

3) 정종진(20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생태학적 모형에 기초하여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체 계	요 인
개인적 요인	성별, 신장과 체격, 공격성과 충동성, 불안과 우울 및 자존감, 인지적 대인문제 해결 기능의 부족, 신체적 정신적 장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 등.
가정적 요인	처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 관계와 태도, 부모의 불화,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 위협적인 가정분위기,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부모의 무지, 부모의 지시와 감독의 부재
학교 요인	교사와 학교당국의 폭력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 학교폭력에 대한 미온적 반응, 안전하고 평화롭지 못한 부정적인 학교풍토, 과밀한 학교와 학급의 학생 수, 폭력 가해 또래집단과의 접촉 등.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 교사의 체벌, 부정적인 학교환경
사회문 화적 요인	대중매체에서의 폭력 노출, 유해환경, 빈곤과 범죄율, 폭력에 대한 성인의 방관, 경쟁적 사회풍토, 여가활동의 기회나 시설의 부족 등.

[표2]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 학교폭력의 실태

1) 관계적 공격성의 증가

구분	'12년 2차	'13년 2차	'14년 2차	'15년 2차	'16년 2차	'17년 2차	증감(건)
언어폭력	36.9	12.6	8.2	6.1	5.3	5.6	0.3
집단따돌림	12.4	5.9	3.9	2.9	2.6	2.6	0.0
스토킹	7.7	3.2	2.3	1.9	1.6	1.7	0.1
신체폭행	10.5	4.1	2.7	2.1	1.8	1.7	-0.1
사이버 괴롭힘	8.0	3.4	2.3	1.7	1.5	1.7	0.2
금품갈취	17.7	3.3	1.8	1.2	1.0	1.0	0.0
성추행·성폭행	3.5	1.2	0.9	0.7	0.7	0.8	0.1
강제심부름	12.3	1.9	1.0	0.7	0.6	0.6	0.0

[표 3]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⁴⁾

2017년 2차 학교폭력전수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피해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집단따돌림→스토킹→신체폭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엄벌주의 정책으로 인해 외현적 폭력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잘 들어나지 않는 관계적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관계적 공격의 특징은 은밀하게 집단 내에서 나타나 공격을 당하는 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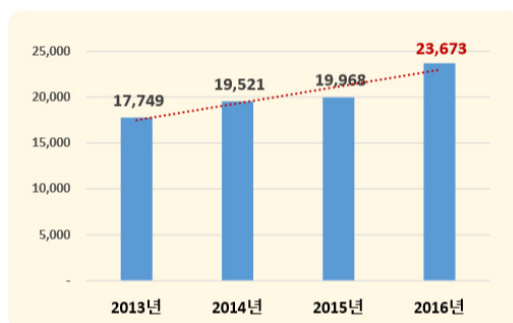
4) 교육부(2017. 12. 06).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외에는 알기가 어렵고 타인의 개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 괴로움으로 심한 경우에 자살까지 이를 수 있다.⁵⁾ 관계적 폭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다. 가해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동자를 도와주거나 단순 동조하는 행위까지, 학생들은 또래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해 그룹에 가담하게 된다. 관계적 폭력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띠게 되어 일상화된다. 일상화된 폭력으로 인해 가해 당사자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 그룹은 유대감을 갖는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주류 그룹으로써 쉽게 옹호하게 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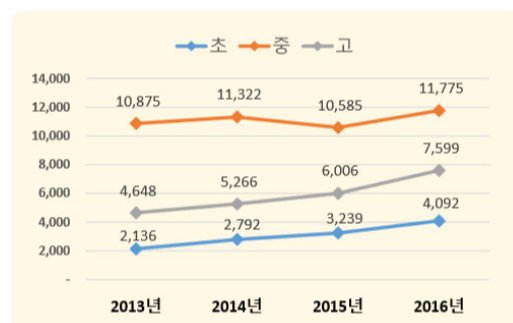
2) 사소한 사안까지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소통과 갈등해결능력의 부재

[그림1]⁷⁾과 [그림2]를 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13년 17,749건에서 2016년 23,673건으로 33.4% 증가했다. 이는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송의초 학폭 사건, 울산 중학생 자살 사건 등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들로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학폭위에 신고하여 형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B학교폭력담당교사는 ‘너도 당해 봐라’식으로 학폭위가 마치 복수의 장치럼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소한 갈등의 초기 단계는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 기회마저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



[그림1] 자치위원회 전체 심의 건수



[그림2] 학교급별 심의 건수

5) 한영경, 김은정(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한국심리학회.

6) 김대군(2013). 관계적 폭력과 소수자 배려윤리. 윤리교육연구.

7) 정제영(2017).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교 중심 학교폭력대책(안),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3. 현행 학교폭력 대처와 예방법의 한계

가. 생태학적 접근이 아닌 개인의 인성문제로 다루는 단편적 접근

현 학폭법의 절차는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으면 학교폭력조치는 종결된다. 학생들 간의 관계 개선은 학교폭력처리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가해학생이 1호~9호 조치를 받는 것으로 학교폭력처리가 종료된다. 이는 학교폭력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인성 문제로만 보는 단편적 접근이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문제해결과 해법탐색 또한 생태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가해학생들이 처해있는 가정상황과 학급·학교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들에 변화가 없다면, 또한 주변 급우 및 부모와 교사·학교의 지원이 없다면, 피가해학생 간의 행동과 관계 패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가해학생의 처벌로 종료되는 현 학폭법으로는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나. 관계적 공격성을 다룰 수 없다.

지난 6월 울산 A중학생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이모군(13)은 친구들이 이군의 말투를 따라하며 놀리거나 뒤통수 때리고 모자를 잡아당기고 점퍼를 발로 밟거나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이 있어 왔다. 이군이 학교폭력 신고를 두 차례나 했지만, 모두 ‘장난을 많이 쳤으나 조치할 사안 아님’의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를 기조로 개정된 2012년 학폭법 이후에 폭력의 양상은 외현적 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관계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적 폭력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사안이 사소하고 애매모호하게 보여서 현행 학교폭력법으로 조치했을 때, ‘학교폭력 사안 아님’의 결과가 가능하다.

뚜렷한 증거 없이 교사가 학생들 간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자칫 학생과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호소하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예민하다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감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교 현장은 관계적 폭력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루지 못한 채,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

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약화, 학교의 사법기관화

학교가 점차 교육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이 되어 가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학교폭력예방법은 애초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그 사안의 처리를 교육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점차 형사정책 기조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교사의 책무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닌 신고이며, 학교폭력담당 교사는 마치 형사처럼 진술서 및 증거자료 확보와 당사자 간의 진실공방이 발생하면 목격자 증언과 피해증거 자료 확보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교사의 정체성 혼란뿐만 아니라 행정적 업무량 증가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교사는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면 행정적 절차에만 집중하게 되는 비교육적 구조에 처해있다.

라. 학교공동체를 약화시키는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교육부가 발표한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중 ‘신고효과를 봤다’는 학생이 36%에 불과하다. 학교폭력조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재심청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맺어진 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절차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에 불신과 자기방어를 강화하고 공동체 안에 배제와 혐오의 분위기를 증폭시켜 오히려 관계악화와 공동체성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그림3] 전국 학교폭력재심 건수 및 징계불복 행정소송 추이

4.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한 해법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문제를 야기한 예전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현행 학폭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방식에 대한 반성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혹한 형벌이 높은 범죄억지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법적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된 사항이다. 더구나 성장기에 있는 학생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형사사법적이 아닌 교육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벌보다는 관용이며, 억압보다는 설득이며, 타율적인 복종보다는 자발적 순응이어야 한다.⁸⁾

학교폭력문제의 교육적 해법을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폭력문제를 개인의 인성문제로 보고 가해자 처벌로 종결되는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을 고려한 생태학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증가하고 있는, 입증 증거가 불분명한 관계적 폭력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해결과정에서 인격의 침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모든 절차와 과정은 교사의 권한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보다 양쪽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윤리적 차원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공동체 안의 어떤 갈등이든 억압되거나 은폐되지 않아야 하고, 투명하게 드러나서 민주적이고 공식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5.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능성과 실천 사례

가. 회복적 생활교육의 의미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법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제안한다.

“처벌이 누군가를 책임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또 다른 방법은 잘못된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을 불러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피해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⁹⁾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둔 접근을 응보적 접근(정의)이라고 하며,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함께 해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을 회복적 접근(회복적 정의)이라고 한다.

사법에서부터 시작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이 교육영역까지 확장된 것이 회복적 생활교

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안내」에 따른 전북교육감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 2012.07.30

9) 마거릿 소스본(2013). 학교의 회복적 실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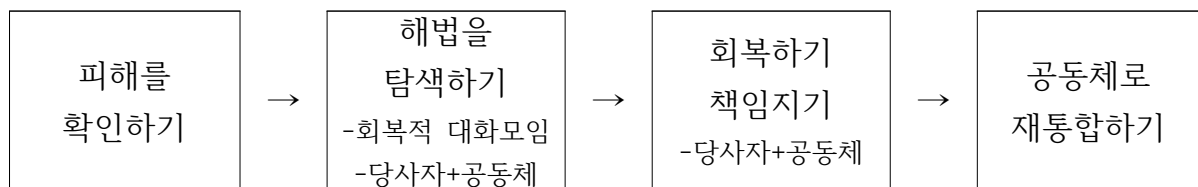
육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사후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부터 훈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법은 처벌과 엄벌주의에 기초 한 응보적 접근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잘못이란 규칙위반이 아니라,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잘못이라고 규정한다.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가 재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피해 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문제 행동으로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회복하고 공동체가 다시 통합되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다음과 같다.



[표4]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칙]¹⁰⁾

- 발생한 피해와 그에 따른 관련자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피해자는 물론, 공동체와 가해자도 포함).
-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한다(가해자뿐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의무까지도).
- 문제 상황에 실제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주체를 참여 시킨다(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일원, 지역사회).
- 관계가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치]

- 관계가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며, 규칙은 관계를 위한 부차적인 것이다.
- 모든 학생과 교사, 교장, 학부모는 학교 공동체의 가치 있는 일원이다.
- 학교 정책이나 학교 규칙은 반드시 학교 공동체가 모두 합의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

10)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주디 H 물렛 지음.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2012. KAP.

세워져야 한다.

-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행동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한다.
-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 준다. 즉 경청과 성찰, 문제해결능력, 신뢰와 책임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준다.
- 갈등은 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 학교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의 초점을 가해측의 처벌에서 피해측의 회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잘못에 대한 책임은 강제적 조치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는 자발적 책임에 기초하여 이뤄져야 한다.

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적용 가능성

- 회복적 대화모임을 중심으로

1) 생태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회복적 대화모임에는 발생한 문제와 직간접적 관계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 갈등 당사자의 가족, 학급 공동체의 구성원, 지역 사회 구성원 등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의 생태학적 환경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처한 환경에서의 생태학적 해법과 지원을 모색할 수 있다.

2) 관계적 폭력을 다룰 수 있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형사사법과정에 비해 내용적으로 열려있고 유연하므로, 특정 절차규범에 매이지 않는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어떤 엄격한 절차규정이나 증거규정이 없고, 사안과 관련한 법적 구성요건요소를 포섭해야 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의 갈등 경험과 폭력 경험을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중점을 두어 자신의 말로 묘사할 수 있다. 대화모임 진행자의 입장에서도 당사자들이 하는 진술내용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판단하거나 사실 내용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므로 갈등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현실적 관점을 서로 보게끔 이끌 수 있다. 규문적인 성격의 질문을 피하고 당사자의 자기설명과 상황설명을 지지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서 더 나은 이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¹¹⁾ 또한 회복적 대화모임은 가해자가

11) 정현미(2007). 가정폭력 등 관계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가능성. 법학논집.

유죄인정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사소하고 애매모호해 보이는 관계적 폭력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단순한 폭력 사실 시인보다 더 의미가 있다.

3)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교사에게는 가해자·피해자이기 전에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교사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모두의 편이다.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교사는 모두의 편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회복적 대화모임에서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은 파·가해자가 아닌 갈등당사자 또는 관련학생으로 불린다.

회복적 대화모임에서 갈등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어떤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파·가해 학생 모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게 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회복적 대화모임이다.

라. 회복적 대화모임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 실험, 갈등 전환 프로세스 ‘회복적 대화모임’

회복적 생활교육이 한국에서 시작된 2011년 이후 ‘회복적 대화모임’을 적용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 학폭법에 의하면, 사소한 갈등이라도 학폭위에 따라 처리해야하므로,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나 교사가 교육적 선택을 위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복적 대화모임을 적용한 대상으로 그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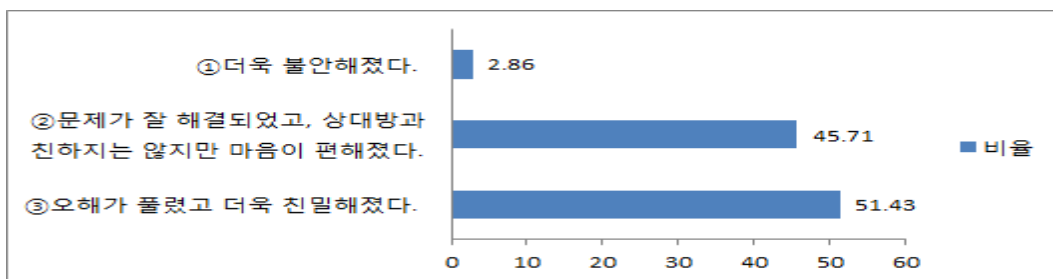
조사 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대상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경험 교사 및 회복적 대화모임 참여 학생
인원	교사 129명, 학생 70명(피해 29명, 가해 41명)
조사 기간	2016년 6월22일 ~ 6월28일 (7일 간)
조사 기관	(사)좋은교사운동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의 심리적 안정 상태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의 자기성찰 및 관계성 개선 정도 -회복적 대화모임의 다시 선택 여부 -회복적 대화모임의 효과성과 부작용 -회복적 대화모임에서의 어려운 점
-------	---

[표5] 회복적 대화모임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 학생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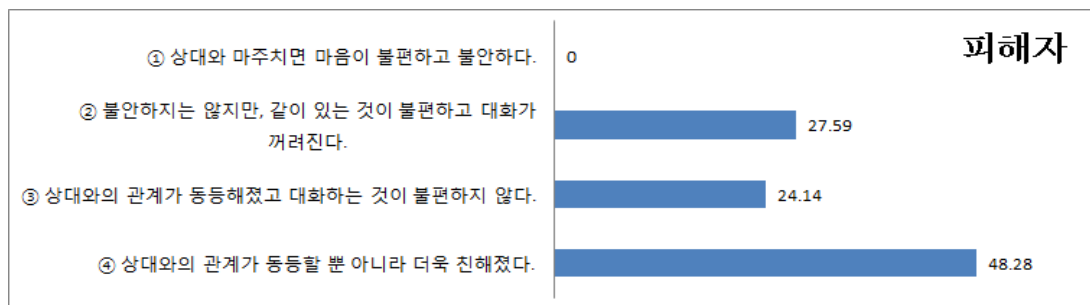
가)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 심리적 안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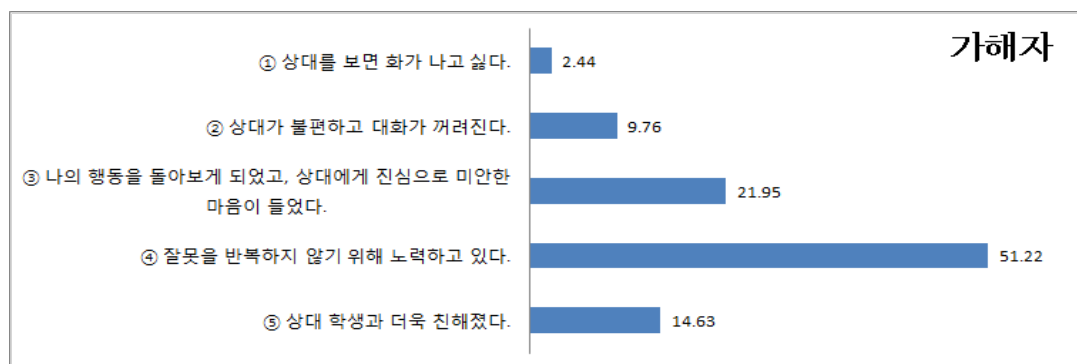
[그림4]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의 심리적 안정 상태는?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석한 이후에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는 ‘오해가 풀리고 친밀감 향상’(51.4%)과 ‘문제 잘 해결되었고 마음이 편해짐’(45.7%)로 97.1%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답하였다.

나)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의 자기 성찰 및 관계 개선 정도



[그림5]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의 자기 성찰 및 관계 개선도(피해자 입장)



[그림6]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의 자기 성찰 및 관계 개선도(가해자 입장)

피해학생의 경우에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동등한 관계 개선(72.42%)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고, 가해학생의 경우에 자기성찰·잘못의 재발방지 노력·친밀감 향상에 87.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위의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회복적 대화모임은 가·피해자의 동등한 관계 개선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친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갈등이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갈등의 계기로 관계가 더욱 좋아지게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 회복적 대화모임의 다시 선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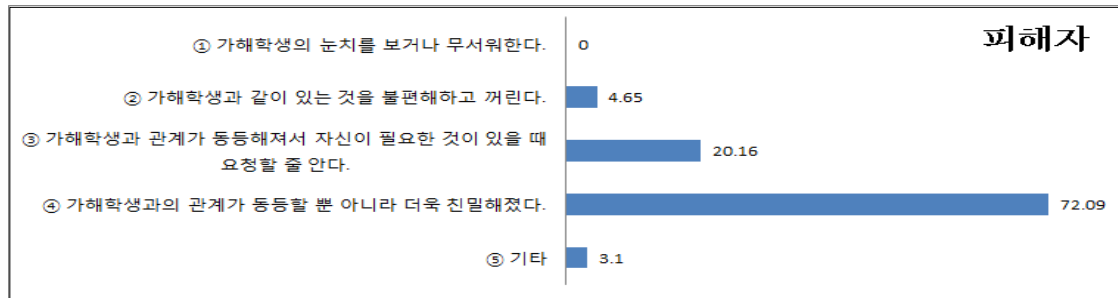


[그림7] 회복적 대화모임의 다시 선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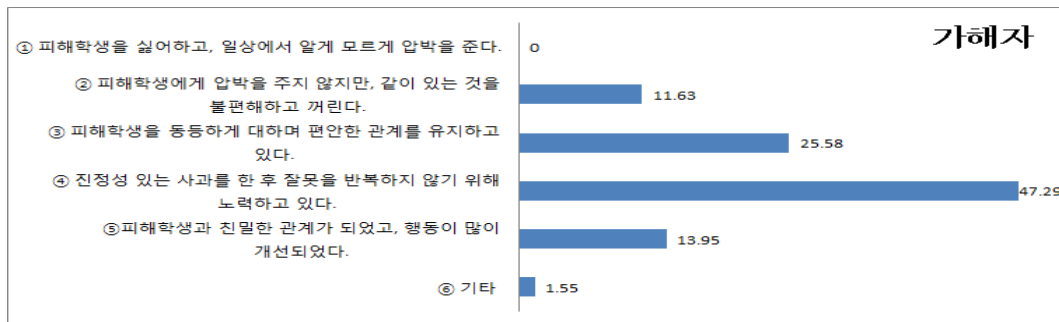
학생들은 갈등이 발생하면 회복적 대화모임을 다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95.71%가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95.71%는 회복적 대화모임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효과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교사 답변

가)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의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 상태와 자기 성찰 정도



[그림8]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의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 상태와 자기성찰 정도(피해자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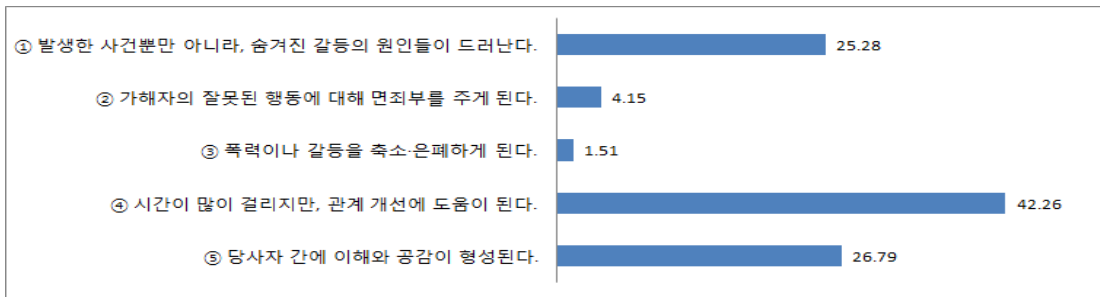
[그림9]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 상태와 자기성찰(가해자관찰)

학생들의 응답 뿐 아니라 교사의 관찰에 의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들의 관계성 개선과 심리적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교사가 관찰한 가해자의 태도는 진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로 여긴다. 교사는 가해학생의 태도 개선에 긍정적 답변으로 86.82%로 높게 나타났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가해·피해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회복적 대화모임의 만족도와 부작용 우려정도

회복적 대화모임의 만족도는 94.33%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비해 가해학생에 대한 면죄부 또는 폭력의 축소·은폐는 5.55%로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회복적 대화모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폭력을 축소·은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복적 대화모임을 실제 적용한 교사들의 피드백에 의하면, 오히려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갈등이 더 드러나게 되어 폭력의 은폐나 축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4.15%로 실제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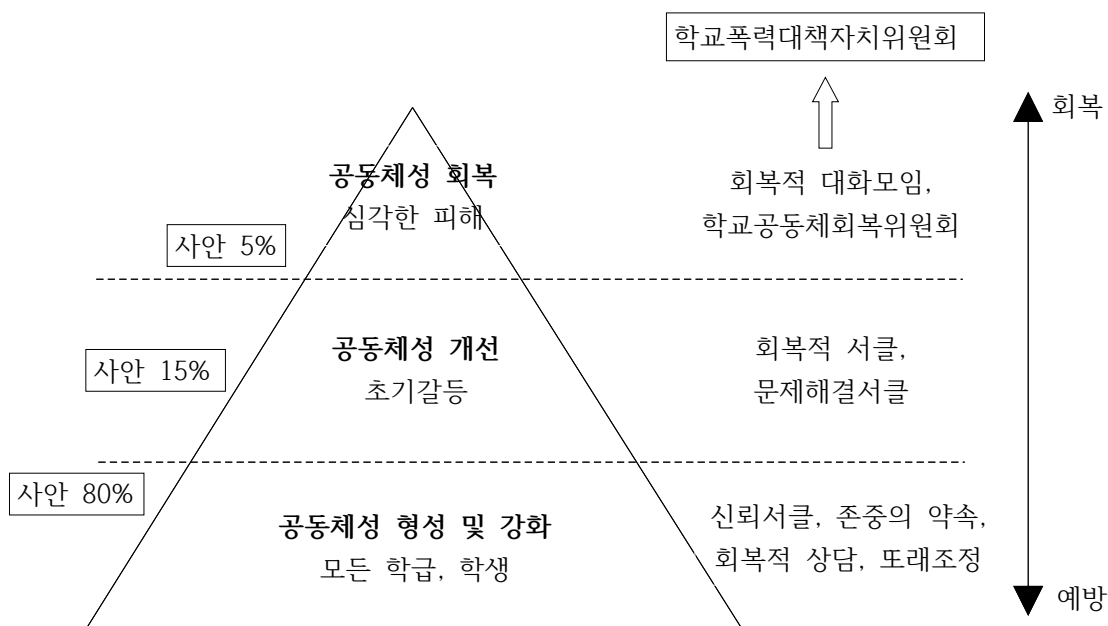


[그림10] 회복적 대화모임의 만족도와 부작용 우려정도

6. 회복적 생활교육 실현을 위한 제안

학교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학교폭력문제의 사후 대처에만 그치면 안 된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인 예방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회복적 생활교육은 전학교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이 전학교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곳을 회복적 학교라고 규정할 수 있다.

가. 회복적 학교 시스템 구축



[그림11] 회복적 시스템 구축, 전학교적 차원의 접근

회복적 시스템 구축은 [그림11]과 같이 세 개의 층위로 이루어진다. 맨 아래 층위는 학교폭력이나 갈등의 예방단계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가운데 층위는 경미하고 사소한 보이는 약한 갈등이나 폭력을 다루며, 맨 윗 층위는 심각한 갈등과 폭력을 다루는 영역으로 전체의 1~5%의 심각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폭력 예방적 차원, 공동체성 형성 및 강화단계

예방적 차원의 공동체성 강화단계는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교사의 일이며, 학교에서 가장 많은 자원과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영역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사회 정서적 역량을 개발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공동체내의 소속감, 안전, 복지, 구성원 간 존중의 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공동체성 강화 영역의 특징은 변화를 위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면 공동체 내의 많은 갈등과 충돌이 양산되고 아무리 회복적 대화모임으로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폭력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경미하고 사소한 폭력, 공동체성 보수 단계

학교 안에서의 대부분의 갈등이나 폭력은 이 수준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 시기인 만큼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잦을 수밖에 없다. 옛말에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다.”라는 의미가 이 단계에 속할 것이다. 사소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상의 갈등이나 어려움은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 간에 발생하는 학생수준의 갈등은 ‘포레조정프로그램’을 통해 다룰 수 있다. 학생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라면 교사나 공동체 또는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문제해결 서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학생과 학생 간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인 교사-학생, 교사-교사, 교사-학부모 간의 갈등도 해당된다.

3) 심각한 폭력, 공동체성 재건 단계

공동체 내의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수록 소소하고 경미하지만 잦은 갈등과 충돌이 발생한다. 경미한 갈등이나 충돌이 제때에 다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거나 간과되면 갈등과 피해가 누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발전한다. 이런 경우 징계를 결정하는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양측 당사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게 된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피해회복보다는 정해진 처벌 결정을 받기 때문에 피해측도 피해회복의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지 못할뿐더러, 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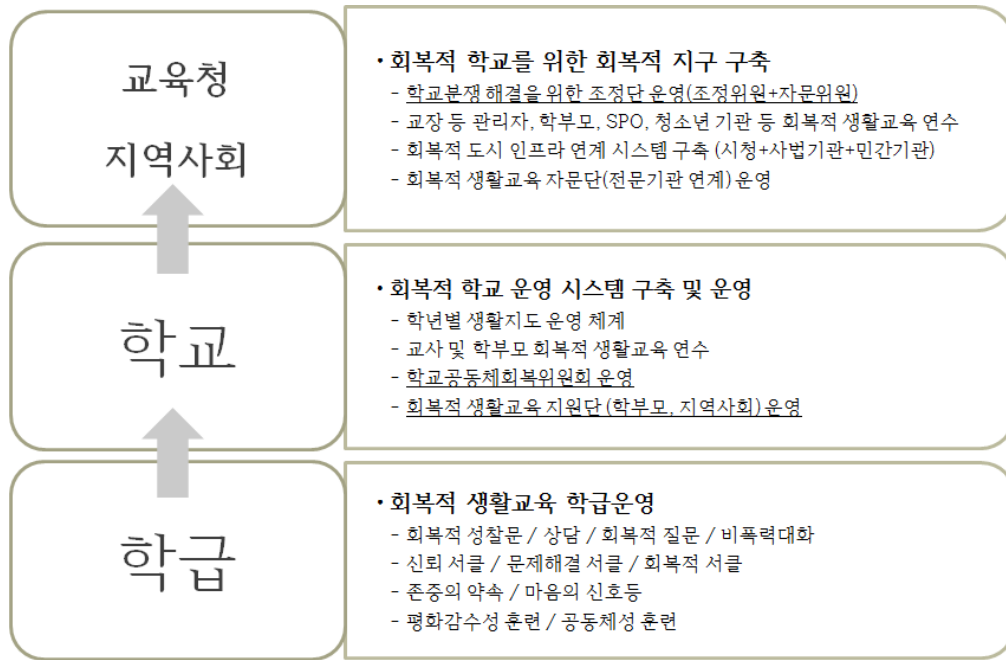
측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처벌을 줄이는데 급급하게 되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본질을 인식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대화와 당사자 간 협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게 된다. 이보다는 공동체의 갈등을 당사자들이 직접 다룰 수 있는 회복적 대화모임이 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뤄져야 한다. 사안의 시급성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벌 결정은 양측의 대화와 협의 시도 후에 이뤄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교내에 ‘공동체 회복 위원회’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둘러 앉아 피해회복과 자발적 책임을 논의 할 수 있는 장치를 둘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회복위원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체 문제를 공동체가 스스로 돌본다는 의미를 가진다. 종국적으로는 현재 학교에서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갈등을 다루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공동체 회복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나. 회복적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 구축

학급의 노력이나 학교의 선을 넘어서 심각한 폭력은 학교가 아닌 상위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각한 폭력의 발생은 학교의 책임도 크기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가 있기 때문이고, 교사가 갖는 조정능력이나 진행능력이 모두 전문화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폭력의 정도에 따라 외부 기관 주도하에 다양한 형태의 회복적 대화모임과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즉 학교의 문제가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육청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입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갈등이 사법으로 넘어가는 순간 학생들과 가정, 그리고 학교 공동체는 구조적으로 대결적 구도와 파괴적 관계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곧 비교육적 방식의 갈등접근이라는 한계를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따라서 회복적 대화모임을 담당하는 외부기관으로써 지역교육청 내에 ‘갈등조정팀’ 또는 ‘갈등조정지원단’을 구성하거나, 회복적 정의와 평화적 갈등해결을 시도하는 지역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회복적 정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사법적 접근이다.

아래 표에서 정리된 것처럼 회복적 생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회복적 학교, 더 나아가 회복적 마을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급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교원들이



[표6] 회복적 학교 지원체제

선택할 수 있는 회복적 접근 방법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학폭법의 개정이 이런 모든 회복적 생활교육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갈등하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교사들의 생활교육 범위를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현재의 시스템이 변화해야 회복적 생활교육 접근이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갈등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없이는 실질적 해결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법의 취지가 바뀌어야 한다. 어느 시대와 사회이건 다음세대에게 단절과 응징만을 가르치는 생활교육과 가정교육은 없다. 이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기관인 학교의 기능을 생활지도 영역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다.

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

현 한국사회와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운영하기에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미흡한 상태이다. 학교 안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없는 학폭법개정 만으로는 단기적 단계에서 그칠 위험이 있다.

1) 회복적 정의의 가치 공유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가치 공유와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여론은 여전히

엄벌주의에 머물러 있다. 공동체가 회복적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엄벌주의와의 끊임없는 충돌로 온전히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기 어렵다.

2)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학생 수준의 갈등은 학생 단위에서, 교사 수준의 갈등은 교사단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갈등관리역량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을 지원받아야 하며, 많은 갈등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능한 초기 단계부터 개입되어야 한다.

3) 인적 자원과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계발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물질적 자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7. 마무리

회복적 대화모임이 학교폭력 은폐와 가해자의 면죄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는 현실적으로 학생과 눈 마주치고 대화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회복적 생활교육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솔직하고 안전한 대화의 장은 은폐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대화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많이 들지만 대화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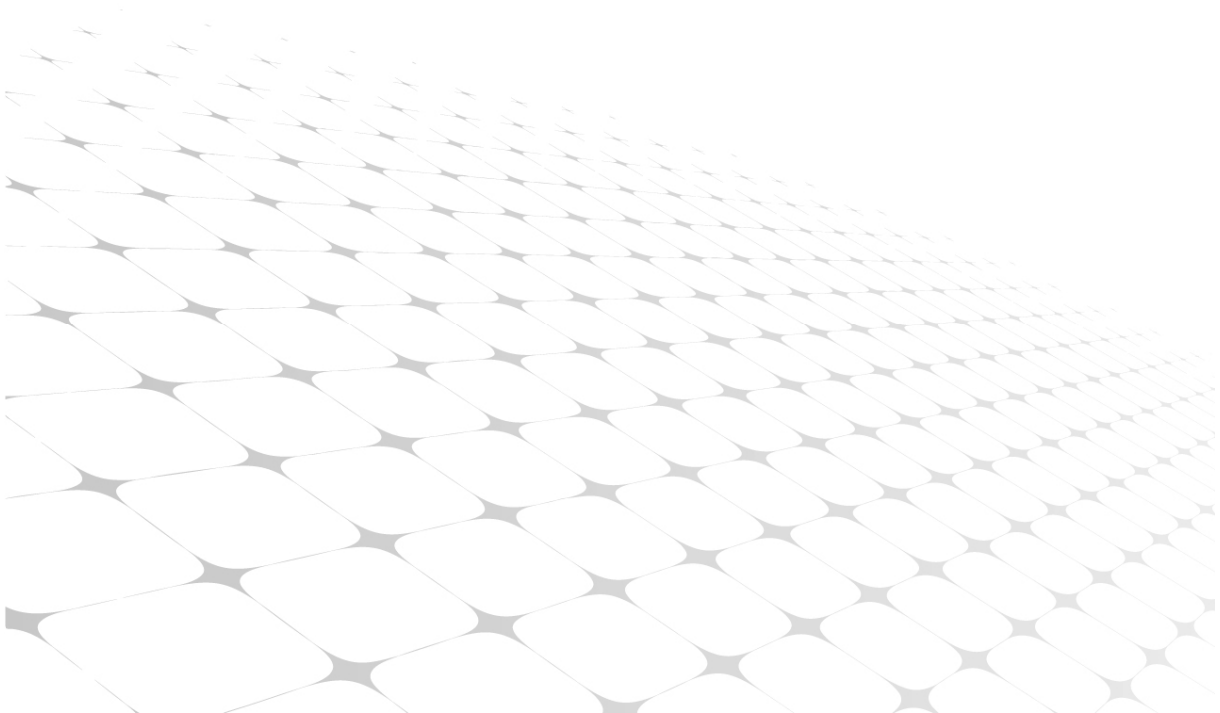
학교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학교가 교육기관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발 제

02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법의 개정 방향

탁경국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탁경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 위원회)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법의 개정 방향

1. 문제의 제기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특별히 대응할 필요에 의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이 2004년도에 제정 및 운용되어 오던 중 2011. 12. 20. 대구 모 중학교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2012. 2. 6.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발맞추어 2012. 3. 21.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되었고, 현행법과 교육부의 학교폭력처리지침(매뉴얼)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사법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 또는 힘의 우위를 동반하는 물리적 폭력을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학생의 온전한 피해회복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고,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징계조치를 한 후, 징계조치를 무조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 가해학생은 반성 대신 방어에 급급해질 수 가능성이 농후하고, 징계조치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진정한 사과를 받을 가능성도 축소된다. 특히,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학교의 담당교사는 소송의 상대방(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과 대립 당사자가 되어 교사와 학생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사안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학생,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더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¹⁾.

1)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을 폐지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2004. 7.경 이전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소년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보호처분 포함)하였고, 그 정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선도위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현행법이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본 후, 학교가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2.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안처리의 골자

가. 광범위한 학교폭력 개념

학교폭력예방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자치위원회의 필요적 개최

학교폭력이라고 의심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목격자는 이를 학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는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통보받은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이다.

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였다},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을 뚜렷한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일이다.

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의 의무화

일단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해학생에게 선도조치를 하여야 한다(2012. 3. 21. 개정 전에는 자치위원회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기재·보존하게 하면 담당교사가 학생 개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 전력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작성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학적사항: 학생의 입학 전 학교의 이름 및 졸업 연월일,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 및 내용 등. 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학교생활기록의 구분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한다.

②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의 구성 항목, 작성 기준 및 작성 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학교생활기록의 보존 등)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⑤ 학교생활기록의 보존, 정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마. 조치에 대한 불복 수단

(1) 가해학생의 불복수단

1호~7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국공립), 민사소송(사립)만 가능

8호, 9호: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도 가능,
불복시 행정심판, 행정소송(국공립, 사립)

법 제17조의 2(재심청구)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피해학생의 불복수단

1호~8호: 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

불복시 행정심판, 행정소송(국공립, 사립)

법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학교폭력예방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자치위원회의 업무 과중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갈등마저도 학교폭력으로 포섭되고, 일단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무조건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하는 법체계에서는 자치위원회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단위 학교에서의 자치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제 하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기피 신청 제도²⁾를 활용하게 되면 자치위원회가 앓는 몸살의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2) 시행령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나. 교사의 위법행위 조장

사실,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자치위원회가 소집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를 감안하여 담임 또는 학교장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2014. 12. 교육부 발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자체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사실상 무의미한 내용이다. 만약 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되지만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담임 또는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학교폭력이 있으면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정한 조치를 의결해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3조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현실에서는 매 사안마다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교사들이 위 가이드북을 방패삼아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변칙적 합의 및 소송의 급증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주로 그 기재 내용이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일순간의 사소한 실수가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 학부

모로서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거액의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고, 일단 기재가 된 후에는 기재 내용을 삭제시키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강행한다. 학교는 이에 대응하는 수고를 또 다시 해야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 학생을 공격해야 한다.

라. 법 제18조의 기능 약화

다음과 같은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교육적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는 반드시 행하여져야 하고, 이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다. 조정이 가능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앞에서 살펴본 교육부 발간 가이드북에 따라 담임교사의 조정으로 종결된다. 즉, 담임교사의 주선 하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법 제18조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법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할 수 있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시행령 제25조(분쟁조정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조정 개시)

① 자치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29조(분쟁조정 결과 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이 외에도 가해학생의 재심기관과 피해학생의 재심기관의 이원화로 인하여 빚어지는 문제, 자치위원회 구성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 등이 있으나 이 글의 목적상 일단 논외로 한다.

바. 개선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학교폭력의 개념을 축소시키거나 (2)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3) 자치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해학생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1) 학교폭력의 개념을 축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결국 (2) 또는/그리고 (3)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담임교사 또는 전담기구가 양 당사자를 원만하게 화해시키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고, 자치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처리 결과는 모두 감독관청에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4. 구체적 대안

(1) 개정 전 제17조로의 복귀

2012. 3. 21. 현행법 제17조가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9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 개정 전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다룰 때 당사자가 진정한 화해에 이르게
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룰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행법 제18조를
활용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동석 하에 대화를 주선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들의 진정한 화
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조치를 하지 않을 권한까지도 가질 필요
가 있다.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³⁾, 경미하지 않은 비행행위라고 판단하여 심리를 개시한 사안에서 조차도 보호처
분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⁴⁾ 이러한 소년법 규정과 비교하여 보더라
도, 자치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제13조의 단서 신설

현행법 제13조는 2011. 5. 19. 신설된 조항⁵⁾을 보충한 조항인데, 2004. 7.30. 최초로

3)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
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법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
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4)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제13조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행된 법에서는 학교장과 자치위원회에 자치위원회 소집에 관한 재량권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제11조 ④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까지 자치위원회 소집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므로 현재의 조항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3조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해당 학생과 학부모가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금지⁶⁾

만약 위에서 언급한 (1)안이 채택된다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시킬 필요성은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 헌법재판소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의 근거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중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서면사과, 보복금지, 교내봉사, 학급교체 등의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경미한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도 학교폭력예방방법상의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고, 비록 경중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단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학교폭력예방방법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것이라면, 앞서 보았던 학교생활기록부예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그리고 기재된 조치사항의 종류를 보면 문제 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역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단지 조치사항이 기재되고 보존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나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으로 판단하여(2016. 4. 28., 2012헌마630 결정) 위헌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1)안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설사 (2)안이 채택된다 할지라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하는 것이 현행법 제18조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보완사항

법 개정이 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매뉴얼도 화해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선 학교가 화해시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능한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양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5. 마치며

자치위원회의 사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단위학교마다 다른 수위의 징계조치가 내려지면 그 대상자는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공정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일선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현행법상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있는 학부모위원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거나, 자치위원회를 단위학교 마다 설치하지 말고 각 교육청 내지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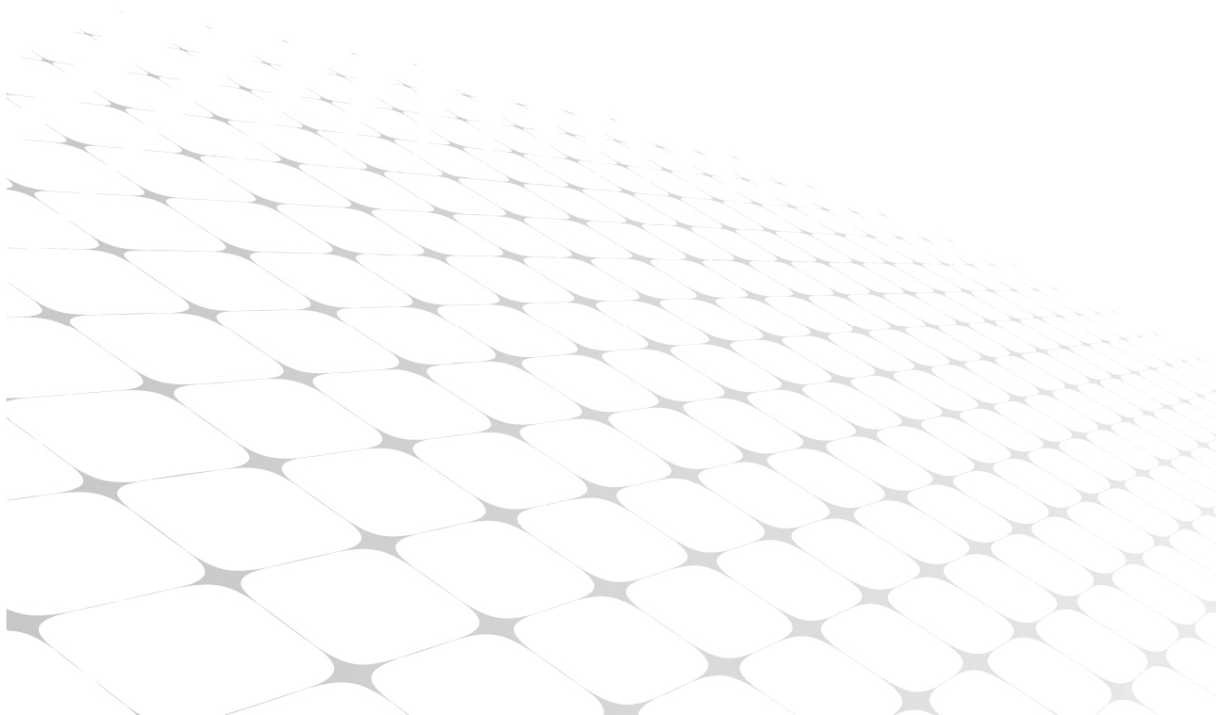
위와 같은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치위원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사법적 기능만 생각한다면 소년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은 학생을 다시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단위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하여 사법적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

발 제

03

회복적 과정으로 학교 폭력 풀어가기

안보경 교사(강화여자중학교)



안보경

강화여자중학교 교사

회복적 과정으로 학교 폭력 풀어가기

1. 돌아봄... 그리고 답답함

신흥중학교에서 학교폭력책임교사로 2016학년도까지 4년을 근무하였다. 학교폭력의 양상은 남학교여서, 신체폭력 언어폭력, 정서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는 담임교사가 신고하지 않고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확인하여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신고가 된 경우에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신흥중학교는 관련 학생 간의 회복(피해, 관계, 책임, 정의)에 관심을 두고 그 절차를 진행한다. 즉 학폭 사안인 경우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브렌다 모리슨의 공동체성 보수 단계인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하였다. 초기 진행 방법은 책임교사 1년차로 경험이 미숙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후, 그리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처리된 후 회복적 대화모임을 가·피해학생에게 지정하였다. 이 경우 서로의 욕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미가 있었다고 학생들이 보고 하였으나, 회복적 대화모임의 자발적 참여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여 대화모임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로 보여 지기도 했다. 2년차 이었던 2014학년도부터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복적 대화모임을 학교폭력전담기구 협의회를 통해 실천했다. 관련학생들과 사전모임을 하고, 본모임은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에서 관련학생과 부모들이 함께 만나 진행하는 방법으로 실천하였다. 물론 관련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하였다. 2013학년도에 비해 가·피해학생들의 관계 회복에 효과적이었고 자발성을 근거로 대화모임을 실천하여 특별히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담임종결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2014년 중반, 가해 학부모가 요청하였고 피해학부모들이 함께 동의하여 사전, 본모임이 있었으나 본모임 도중 결렬되어 이 후 학교는 학폭법을 어긴 것(가,피해 분리의 원칙)으로 인해 신문기자의 협박과 교육청 보고 및 컨설팅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 사안으로 인해 전담기구협

의회는 원래의 역할과 기능으로 회귀하였다. 더구나 2015학년도에는 전담기구협의보다 자치위원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청의 매뉴얼로 인해 대부분의 신고 사안이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행히, 담임종결과 자치위원회 이후 실천했던 대화모임을 관련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서, 이를 제안하거나 또는 제안을 받는 상황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그래서 2016학년도에는 쌍방 사안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방하여 회복적 대화모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담임종결 및 학교장 종결을 할 수 없어(법적인 효력이 없음) 탁경국변호사님 원고에서처럼 ‘교사의 위법 행위가 조장’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더구나 이 경우 문제가 되면 학교, 교사, 관련학생은 함께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 받았다. 때문에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가·피해학생을 돌보고 공감해 주되, 중립성을 잃지 말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적으로 문제없이 깔끔하게 처리·지원하도록 만들어져 학생부장들의 소위 학폭 바이블로 사용되고 있다.

학폭사안처리 매뉴얼¹⁾에 의하면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순 서	해야 할 일	방 법	비 고
1. 신 고 접 수	신고 접수대장 기록	○ 신고 또는 보고, 통보 접수 즉시 접수대장 기록 ○ 접수대장은 사안접수 시 마다 결재	전담 기구
2. 초 기 대 응	관련학생 격리 및 안전조치	○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실 등에서 신속히 응급조치 ○ 추가 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학생 신속하게 격리 ○ 목격자 등 주변학생의 안전 확보	담임 전담 기구 학교장
	사안내용 보호자 통보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히 통보 ○ 통보 내용 등은 기록 유지. 관리	담임 전담 기구 학교장
3. 사 안 접 수 보 고	학교장 보고 및 교육청(지원청) 1차 보고	○ 학교장 보고 및 교육청(지원청) 1차 사안접수 보고 - 신고 접수(인지) 후 24시간 이내 보고(교육부 지침)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3803 : 2013.9.17) ○ 성폭력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 신고 및 담당 장학사 보고	전담 기구
4. 긴 급 조 치	피해학생 긴급보호 조치 가해학생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 제1항)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제4항)	전담 기구 학교장

1)

순서	해야 할 일	방 법	비 고
	긴급선도 조치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	
5. 사안 조사	전담기구의 업무	○ 전담기구의 업무 사안 접수대장 기록 이후 보호자 면담, 사실 확인, 치료, 상담 등 구성원이 하는 모든 절차 및 활동 ○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기록 유지 ○ 전담기구 교사별 업무 - 책임교사 : 전체 사안처리 조율, 사안일지 작성.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등 - 전문상담교사 : 관련학생 관찰 및 상담, 학생 상태 모니터링 - 보건교사 : 피해학생 치료 및 피해 상태 파악	전담기구
6. 사안 조사 및 판단	전담기구의 판단	○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의 자체해결 -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 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단,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한다 해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2014 교육부 사안처리가이드북 38쪽) -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판단할 경우 '조치 없음'으로 처리 가능	전담기구
7. 보호자 안내	사안조사 결과 안내 향후 절차 및 학교안전 공제회 안내	○ 자체해결 또는 사안처리 상황 안내 -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통보 또는 자치위원회 개최 사실 등 향후 처리 절차 등 안내 ○ 향후 절차안내 - 전담기구 활동 → 사안조사 → 자치위원회 → 조치결과 안내 등 향후 절차 구체적으로 안내 ○ 학교안전공제회의 안내	전담기구
8. 자치위원회 개최	보고 및 통보	○ 자치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 - 자치위원회 위원 및 관련학생(보호자)에게 서면(등기우편)으로 발송 ○ 교육(지원)청 2차보고 - 2차보고 양식 활용	전담기구

순서	해야 할 일	방 법	비 고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 보호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 가해학생 선도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2016 교육부 고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의한 조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및 부가적 판단요소(선도가능성, 장애학생 여부)를 고려한 배점 표를 활용하여 조치·결정 	자치위원회
9.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보고 통보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보고,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보고 및 교육(지원)청 3차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보고 양식 활용 보고 ○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모두에게 문서(등기우편)로 통보(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재심 등 불복 절차 반드시 안내 	전담기구
10. 조치 집행 및 사후관리	조치,결과 집행 및 생활기록부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집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 내에 조치 집행 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 ○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집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 집행 ○ 조치이행 거부·기피 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조치 가능(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 제2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전담기구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가해학생 추수지도 ○ 소속 학급 학생 및 전체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피해학생 조치 집행 사항 자치위원회 보고 	
11.	이의제기	○ 피해학생	

순 서	해야 할 일	방 법	비 고
재 심 및 행 정 심 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 ◆ 행정심판 ○ 가해학생 ◆ 재심 ◆ 행정심판 <p>※ 재심 청구 시 자치위원회 조치의 집행 유보</p>	

학폭법 그리고 이상의 매뉴얼은 사안이 발생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답답한 것은 왜 일까? 전담기구는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사안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가·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는 데.... 자치위원회에서 판정점수에 의한 조치는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최소한 서로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 개인이 회복되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통해 학교 공동체가 안전하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 학교가 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이 아닌지...

“피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의실현의 욕구는 가해학생과 학교 공동체가 피해사실과 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절차의 공식성 여부와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²⁾ 라는 말이 떠오른다.

2. 앞으로 나아가기... 어떻게든 관련학생 돕기

가. 학폭법 17조의 복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탁경국 변호사님의 제안처럼 2012. 3. 21. 개정 전 법률처럼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복귀

2)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학교폭력 해결절차의 다층적 작동과 비공식적 회복적 절차의 경험(2016)

한다면 관련학생들이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첫째,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지 않고 관련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한다면 회복의 시간을 돌려주는 방안이다. 즉, 조치를 유보하고 관계회복기간을 제안하여 화해·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경우 화해와 중재(회복적 대화모임)는 교내³⁾ 또는 교외⁴⁾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이를 통해 관련학생들이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자발적 책임 등 학생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책임을 공동체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면적 힘을 기르는 교육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한다.

화해·중재를 제안하고 대화모임을 통한 회복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 교우관계회복기간에 대한 공청회에서 담당교사들이 이를 반대한 이유는 업무 과부하 상태에서,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또 다른 새로운 무의미한 업무일 것이라 불확실하게 예측한 결과이다. 하지만 담당교사로서 관련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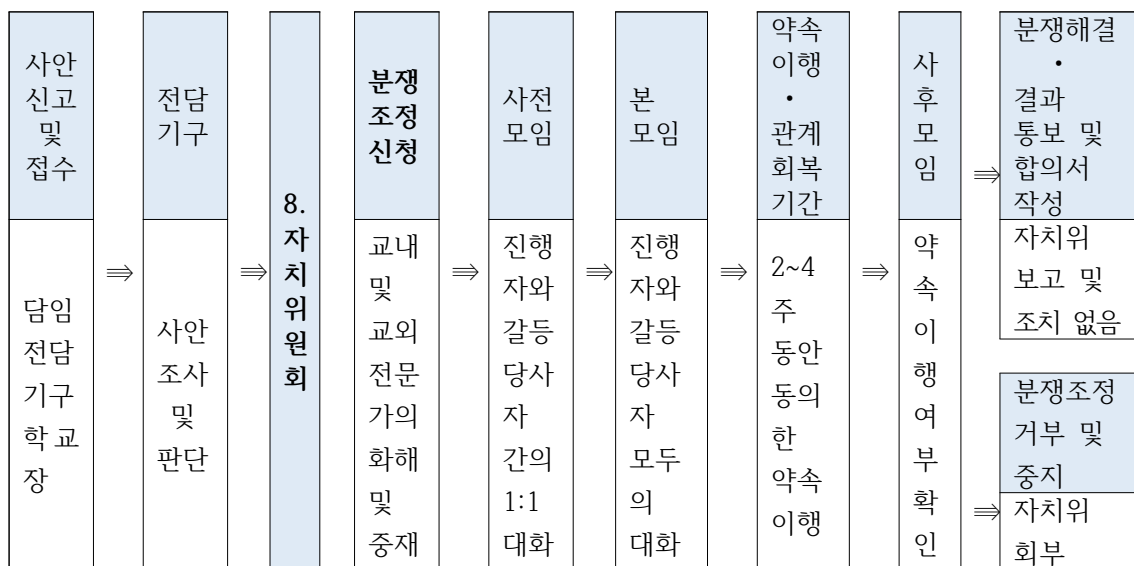
3) 학교 내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 그리고 회복적 대화모임이 가능한 교사를 의미

4) 학교 외 지역사회의 회복적 대화모임 전문가를 의미

을 위한 업무라는 확신이 선다면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학폭법 17조의 복귀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유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 18조의 분쟁조정의 의미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조치 유보는 관련학생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기에 충분한 동기를 제공한다. 때문에 이를 통해 2017년 학폭 사안 처리 매뉴얼에 있는 분쟁조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은 관련학생 관계 회복, 화해 및 치유 그리고 재발방지 및 안전 확보, 피해회복, 교육공동체 복구이다. 이는 학교 공동체에서 회복적 정의를 근간으로 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분쟁조정은 학폭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신청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매뉴얼에 제시된 바, 분쟁조정 상담원칙⁵⁾과 조정진행과정⁶⁾은 회복적 대화모임의 과정과 유사하다.

관련학생의 분쟁조정 신청에 의한 회복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위의 두 경우 모두 결과 통보와 합의서를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여 추인하는 과정을 통해 선도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급증하고 있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부터 학교 공동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사안 가이드북

5) 3) 2017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인천시교육청

에 의하면 “분쟁조정 성립을 이유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분쟁조정 성립은 화해로 간주되어 조치별 적용 기준(법률 시행령 제19조)상 참작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때문에 이 경우 탁경국변호사님이 제안하신 “대화모임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들의 진정한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조치를 하지 않을 권한까지도 가질 필요가 있다.”를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있는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와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참고로 예시한다.

분쟁조정 결과 통보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인	000(학년 반)	연락처 010-0000-0000
분쟁조정 피신청인	000(학년 반)	연락처 010-0000-0000
분쟁조정 결과	000의 욕구	
	000의 욕구	
	자치위 중재안	
	조정결과	예) 1. 000의 000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토 조정 중지 2. 000의 분쟁조정 거부로 조정 중지 3. 당사자 간의 합의 성립으로 합의서 작성 후 종료
201 년 월 일		
인천00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합 의 서

1. 000 (인천00학교 학년 반)
보호자 000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아파트 동 호)
연락처 010-0000-0000

2. 000 (인천00학교 학년 반)
보호자 000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아파트 동 호)
연락처 010-0000-0000

201 년 00월 00일 11:00경 인천 00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000의 000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000은 사실 인정과 함께 사과하며 그에 따른 치료비 등 피해 일체를 배상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요구, 행정신청 신청,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 민사, 형사상 민원을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 합니다.

201 년 월 일

인천00학교 학년 반 000
보호자 000 (주소 :)

인천00학교 학년 반 000
보호자 000 (주소 :)

입회인 00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000

나. 제 13조의 단서 신설

탁경국 변호사님의 제 13조 2항의 단서 신설 제안⁷⁾은 학교폭력사안의 또 다른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첫째, 관련학생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자치위원회 소집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은 화해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자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행 학폭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전담기구⁸⁾

7) 다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해당학생과 학부모가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주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이외에 수석교사, 학년부장, 상담부장 등 보직교사도 구성원이 될 수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안처리 관련 전담기구의 활동은 사안접수 및 보고·통보, 관련학생 안전 조치,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 학교폭력

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있다고 할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담임 및 학교장 종결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폭력사안은 극히 드물어 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사안처리 도입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관련학생 간의 회복적 대화모임이 가능하다면 관련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학폭사안 초기(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등)에 서로의 필요를 듣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가운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할 때 모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다만, 대화모임에 참여는 관련학생의 선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의 회복적 대화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둘째,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예외 조항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사안조사 과정에서 회복적 대화모임을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전담기구 구성원인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가 사안조사 후 자치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기 전, 다시 한번 회복적 대화모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관련학생의 선택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자발적 책임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배울 수 있도록 과정과 대화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가해학생에게 억지로 부과되는 선도 조치보다 의미있는 학교 공동체의 교육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사안 조사 및 응대, 담임 또는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사안조사 내용 보고, 전담기구 활동의 기록·관리 등이다.

전담기구가 사안조사 후 자치위원회 결정 전 회복적 대화모임 선택 제안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학폭전담기구의 사안조사과정에서 화해를 위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폭사안처리 과정에서 담임 및 학교장 종결과정을 학폭법으로 보장하고, 담임 및 학교장 종결의 경우 2015년도까지 교육부 지침으로 활용되었던 아래와 같은 화해 및 재발방지 확인서(담임 및 학교장 종결용)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주는 것도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화해 및 재발방지 확인서(담임종결용)

관련학생	1) 000(/), 2) 000(/)	
보호자	1) 000(/)의 모 000(연락처 000-0000-0000) 2) 000(/)의 모 000(연락처 000-0000-0000)	
관련사안	발생일시 및 장소	201 . 00.00 11:00경 교내 체육관
	사안내용	예) 000(/)에 대한 000(/)의 욕설 (괴롭힘)으로 000(/)이 고통 호소
화해 및 재발방지 약속	※ 관련학생의 자필로 작성 예) ○ 000(/) 저는 201.00.00 11시 경 학교 체육관에서 000을 괴롭혔습니다. 000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것이 학교폭력에 해당 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친하게 지내야 했는데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해주신다면 다시는 000을 괴롭히지 않고 친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앞에서 정말로 약속드립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000(/) 000(/)의 괴롭힘이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과를 받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믿고 더욱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1 년 월 일
 000(/)
 000(/) 보호자 000
 000(/)
 000(/) 보호자 000

인천00학교장 귀하

하지만 위의 ‘가’와 ‘나’의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대화모임진행 인력풀이다.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 학기 초마다 실시하고 있는 학폭관련교사 및 자치위원회 위원의 단순 전달식 교육을 전담기구교사와 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워크숍으로 전환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인력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학생 보상을 위한 공제회 청구 서류 중 자치위 조치결과통보서 대신에 학폭 전담기구 사안조사서가 첨부되어 학교폭력사안임이 증명된다면, 담임 및 학교장 종결로 처리될 경우에도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간의 갈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학폭법... 무엇이 중요한가?

학폭법은 피해학생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을 지원하여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인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학폭법에 의해 가·피해학생은 처음부터 분리되어 학교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날이 갈수록 불안하고 불행한 삶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사건이 발생되면 브로커가 그리고 소송으로 심판으로 학교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기 쉬운 상황으로 전환되곤 한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학폭법... 무엇이 중요한가? 교사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교육전문가이다. 법적인 처벌은 사법기관에서 충분히 형사, 민사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처럼 잘못하는 또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교육으로 만나야 하는 학생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학교가 회복적 과정을 통해 본래의 교육적 의미를 회복하기를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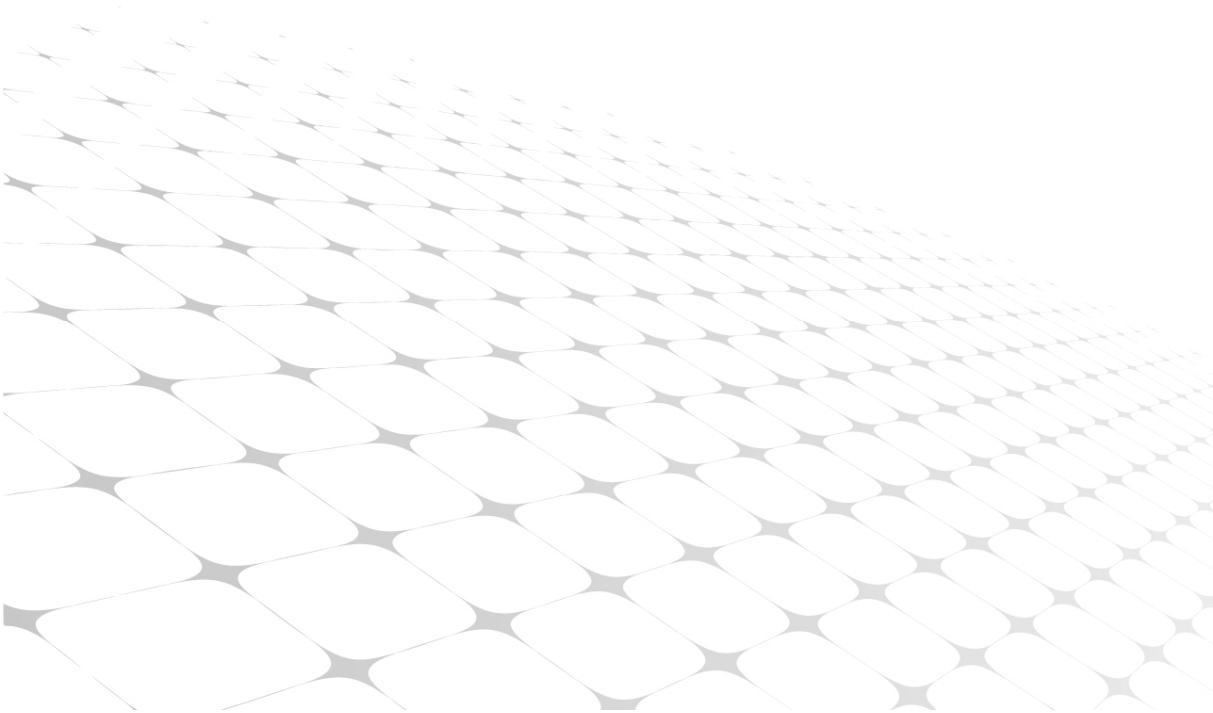


토론

이기철 대표(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조인식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문진 연구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이기철

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대표

문진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연구관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memo

memo

memo

memo

-
- 발행처 : 민주연구원
좋은교사운동
 - 발행일 : 2017.12.21.
-

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